

토론회 자료집

#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 목차

---

|                                        |    |
|----------------------------------------|----|
| 프로그램                                   | 3  |
| 취지                                     | 4  |
| 1부                                     |    |
| 분야별 정책 평가                              | 8  |
| 경제 정책 평가 -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 9  |
| 복지 정책 평가 - 공공성 실종, 퇴행하는 사회복지 분야        | 15 |
| 노동 정책 평가                               | 21 |
| 권력기관 운영 평가 - 국가권력기구 운용                 | 26 |
| 기후·생태 정책 평가                            | 31 |
| 식량·농업 정책 평가                            | 36 |
|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43 |
|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50 |
| 재난·안전 정책 평가                            | 55 |
|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언론·시민사회 표적 탄압과 민주주의 퇴행 | 61 |
| 2부                                     |    |
| 종합토론                                   | 67 |
| 메모                                     | 68 |

## 프로그램

---

|       |      |                                                                                     |
|-------|------|-------------------------------------------------------------------------------------|
| 10:00 | 개회   | 사회 안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장장                                                          |
| 10:10 | 1부   |                                                                                     |
|       |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       | 발제1  |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       | 발제2  |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발제3  |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       | 발제4  |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
|       | 발제5  |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
|       | 발제6  |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
|       | 발제7  | 남북·대외관계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       | 발제8  |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 발제9  |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       | 발제10 |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 11:00 | 2부   |                                                                                     |
|       |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
|       | 종합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br>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br>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br>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 12:00 | 폐회   |                                                                                     |

### 들어가며

-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음.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음. 노동시민사회를 소통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척결하거나 손봐야 할 상대로 대하는 태도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 대통령의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인 언론인식은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
-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 감세를 앞세우며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결과 세수의 부족분은 결국 사회복지 예산 축소 및 사회안전망마저 산업과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등 퇴행이 확대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북을 적대시하는 동시에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임.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다른 한편으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해 반발을 사고 있고 대 중국 반도체 수출도 급감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종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펼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서 보여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한편, 불안에 떨고 있음.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식량안보, 기후적응을 위해 생태보호 국제규범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이 암울한 상황임.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국사회는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서 마주한 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위기,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음.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음.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고자 함.

## 분야별 평가 요약

- **경제정책** :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 **사회복지** :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 **노동분야** :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 **권력기관** :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있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되고 있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총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 기후/생태 :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를 천명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 식량/농업 :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ی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가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아울러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남북/대외관계 :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 젠더/사회적차별 :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 재난/안전 :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한편,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음.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 시민사회/언론 :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 확산시켜 줌.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 1부

## 분야별 정책 평가

---

좌장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제 정책 평가 -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서론

-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1년간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음. 겉으로는 ‘공정’을 강조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정책들을 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등 고자산·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알 수 있음. 때문에 불공정과 불평등,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불공정·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모자라 막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했고, 동일인(총수) 친족범위와 경제형벌까지 완화하고 있음. 아울러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핑계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통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재벌과 자산가를 위한 정책을 단행했음.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복지확대를 위해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더군다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 세수의 증가는 당연히 필요함에도 오히려 감세정책을 펼쳐 정책의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2023년 세수결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동일인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규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22년 12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하였음. 이로 인해 2022년 5월 기준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49.5%나 줄어들었음. 향후 기업집단규제에서 벗어나는 재벌 계열사들이 많아짐으로써 경제력 집중 심화를 비롯해 사익편취, 경영권 세습 등에 악용될 소지가 커졌음. LS와 GS그룹 등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면 규제회피가 가능함.
- 2022년 8월 26일에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개최하여 1차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개정을 한다고 밝힘.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 중 지주회사 관련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미신고 등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음. 이를 1억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함. 2023년 3월 2일에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108개의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을 발표함. 이 중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공정거래법),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형을 시정조치 후 형벌로 전환한다고 함.
-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는 2019년 69건(94,146백만 원), 2020년 72건(288,797백만 원), 2021년 85건(970,106백만 원)이나 되며, 고발건수는 2019년 82건, 2020년 37건, 2021년 3건 수준임. 이렇듯 불공정행위가 만연함에도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임.
- 소결 및 제언
  -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와 함께, 1차 및 2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안이 통과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의 경제범죄가 늘어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6촌과 인척 4촌으로 시행령 개정, ▲1차 및 2차 경제형벌 규정 개정안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수주주동의제(MOM), ▲공정거래법상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2. 재벌특혜 국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비과세)하도록 함. 현행 법인세법상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일반법인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지주회사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대해 달리 적용하는 것을 모두 폐지하고, 지분율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함. 지분율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을 100%, 30~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로 개정함. 향후 국내 모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재벌기업은 총수일가)에 대한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법인세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재벌 총수일가들은 향후 비상장 지주회사와 비상장법인을 이용해 조세회피와 지배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큼.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법 개정을 단행하여 구간별 법인세율을 1% p씩 인하(최고세율 25%→24%)했음.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K칩스법)하여 재벌들의 법인세액공제를 대폭 확대시켰음. 즉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확대시켰음. 일반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상향함.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함에 따라 재벌의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함. K칩스법에 따른 세수감소는 2024년 3조 2,700억 원, 2024~2025년 누적 4조 2,600억 원으로 추계(기재위 검토보고서) 됨.
- 소결 및 제안
  - 현재 우리 경제구조에서 담세능력이 있는 부분은 법인들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고려할 때, 오히려 법인들의 조세부담은 당연함. 정부의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심화, 재벌 세습과 사익편취,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환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정상화(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기존 공제율로 환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상향

### 3.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및 공시가격 왜곡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가격안정 등에 기여하는 종합부동산세제 등 보유세를 대폭 완화했음. 세부담상한은 다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150%로 단일화,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은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표 12억 원 이하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를 폐지했음. 서울은 과표 구간별 0.1~1.6% 까지 인하하였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에서 60%로 인하시켰음.

- 정부는 2023년 3월 23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8.61% 감소해 역대 최대하락이라며 홍보하고 있음. 하락율은 세종이 -30.68%, 인천 -14.04%, 경기 -22.25%, 대구 -22.06%, 부산 -18.01%, 서울 -17.30% 순이었음.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2022년 대비 보유세가 구간별 7.5%에서 3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정부가 공시가격을 하락시키고, 종부세 공제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함으로써 보유세 실효세율이 대폭 낮아졌음. 경실련이 서울 25평형 아파트 평균시세 및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021년 69%에서 2023년 60%로 낮아짐. 나아가 서울 25개구별 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이 2021년 0.24%에서 2023년 0.13%로 떨어졌음. 2023년 3월 8일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는 2021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OECD 국가 중 부동산 자료를 공개한 15개 국가의 평균 0.2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힘.

- 소결 및 제안

- 정부의 보유세 완화는 부동산 재벌기업과 고자산가에 대한 감세이자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한 잘못된 정책에 불과함. 이러한 부자들의 세수 감소분이 향후 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공시가격 폐지를 통한 공시지가 일원화, ▲보유세 정상화(기본공제와 세율 등 기존으로 환원)

#### 4. 재벌과 부자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는 2021년까지는 늘어나다가 2022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음. 세수 금액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자산가치상승 등을 고려하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19년 8.3조 원, 2020년 10.3조 원, 2021년 15조 원, 2022년 14.6조 원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완화시켰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을 최고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 가업자산유지 요건은 80%에서 60%로 완화하였음. 제도의 취지가 명문장수 중소기업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가업유지를 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매출액 5,0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수출거래가 대부분인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수출목적 국내외 모든 거래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로 인해 재벌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유보한 후 국내 모회사로 배당을 통해 재반입하는 조세전략을 수립할 경우 사실상 사익편취와 재벌 승계가 쉬워짐.
- 소결 및 제안
  - 현 정부가 추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 한 것으로 재벌특혜이자 부자감세임. 결국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시키려는 전 단계 작업에 불과함.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2,000억 원으로 축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폐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포함

## 결론

-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정책기조와 방향에 포함시켰으나, 1년간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이는 구호뿐이었음을 알 수 있음.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 주요 기조였음.
- 재벌의 사익편취와 불공정행위,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 경제형벌 규정 무력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추진중에 있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벤처생태계 활성화라는 실익은 없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불러올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야당과 야합함으로써 통과가 유력시됨. 이 법안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며,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임.
- 조세형평성 제고와 향후 늘어날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과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함에도 감세를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은 물론,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2022년 기준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대 재벌 삼성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였음.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1대 재벌이 18%, 10대 재벌 63%, 30대 재벌 77%로 압도적임.

<표 1-1> GDP 대비 재벌그룹 자산총액과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 구분      | 2012     |                     |       |                     | 2022     |                     |       |                     |
|---------|----------|---------------------|-------|---------------------|----------|---------------------|-------|---------------------|
|         | 자산<br>총액 | GDP<br>대비<br>비중 (%) | 매출    | GDP<br>대비<br>비중 (%) | 자산<br>총액 | GDP<br>대비<br>비중 (%) | 매출    | GDP<br>대비<br>비중 (%) |
| 1대 재벌   | 256      | 18%                 | 273   | 19%                 | 484      | 24%                 | 379   | 18%                 |
| 10대 재벌  | 990      | 69%                 | 1,019 | 71%                 | 1,719    | 84%                 | 1,292 | 63%                 |
| 30대 재벌  | 1,318    | 92%                 | 1,324 | 92%                 | 2,217    | 108%                | 1,593 | 77%                 |
| GDP(명목) | 1,440    |                     |       |                     | 2,057    |                     |       |                     |

주) 자산총액 : 공정자산 기준

-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초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나아가 시장은 공정성을 잃고 경제범죄가 넘쳐날 것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초를 버리고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 기초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복지 정책 평가 - 공공성 실종, 퇴행하는 사회복지 분야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서론

- 최근 <한겨레>가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7%로 2007년에서 2021년 사이 3.3%p 증가함. 이는 멕시코(8.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임.
- 한편,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자산 격차는 64배에 이르는 등 자산의 불평등 역시 역대 최대라 할 만큼 심화되었음이 확인됨. 게다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미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안하면, 사회정책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이 앞으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선언하며, 긴축 재정 기조에 더불어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교육·건강 등 사회적 권리 전반에 대한 상당한 후퇴가 예상됨. 일례로 공공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부차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에서도 정권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판단됨. 이러한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공공성의 축소와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단기적으로는 복합적 경제위기가, 장기적으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사회에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윤석열 정부 1년, 후퇴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정책을 평가하고자 함.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사회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공급을 시장에 맡겨둔 탓에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 수가 중심의 과도한 수익 규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문제, 사회보장 수급권 훼손 등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와 공공의 책임보다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제공기관 다변화와 규모화, 민관협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천명하고, ▲사회서비스 수요창출 위한 사회서비스 신상품 개발·공급, 제공기관의 이용가격 탄력적 조정·본인부담 차등화, 제공기관의 수익성 보장 위한 서비스 통합, ▲산업 육성 위한 투자펀드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 포함 복지 분야를 분리해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입법,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개편 등을 추진 중임.
- 이는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전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돌봄과 요양, 의료 등에 대한 정부 역할 포기 선언임.

- 소결 및 제안

-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과 동일함. 과거 반복된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새로운 정책 수단도 확인하기 어려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산업부화와 다름없음. 더군다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없이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담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이에 ▲사회서비스원 정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지, ▲투자펀드 조성 철회 등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전면적 수정은 물론, 근본적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이 시급함.

## 2. 보건의료

-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절감된 비용은 필수의료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민간병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긴축재정 기조하에 사회보험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임. **2023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법에 규정된 **20%**가 아닌 **14.4%** 수준으로 편성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을 항구적 법제화하는 입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도리어 여당은 제도의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함.
-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하며 민간병원 밀어주기에 나섰는데,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함. 경북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도 추진함.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역시 ‘타당성 재조사’에 발목 잡힌 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소결 및 제언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4.5%**로 OECD 평균 **73.5%(2017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침.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는 GDP 대비 **3.3%**로 OECD 평균 **2.2%보다 1.5배** 높음. 정부는 재정 위기인 듯 호도하지만 걱정수준인 데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은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와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기인함.
- 정부 지출 의료비도 GDP 대비 **4.8%**로 OECD 평균 **6.6%**에 못 미치고 있음. **2020년**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한국은 **62.6%**로 OECD 평균 **76.3%**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의료비 총액에서 민간보험·직접 부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은 OECD 국가 중 매우 적고 보장성도 낮은 것이 문제임.
- 이에 ▲건강보험재정 긴축,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윤석열표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병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 중심으로 공급체계 재편이 요구됨.

### 3. 소득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임. 공적연금 개선안을 마련하되 기금운용 개선 방안 논의를 병행하겠다고며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데 이어 실제로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악해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하고 정부와 자본의 영향력을 키움. 또한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한을 확대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노골적 개악 의지를 밝힘.
-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은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 목표' 수준에서 언급할 뿐, 재산기준 완화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개선도 올해 8월에 나올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4~'26)'에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계획뿐임. 상병수당 역시 '시범사업 중'('25년 6월까지 예정)만 제시함.

- 소결 및 제언

- 코로나19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현재의 소득보장제도의 점검과 개선이 요구됨.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도 OECD 중 가장 높은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의 점검이 필요함. 또한 부상이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제도 추진과 이행을 확인하기 어려움.
- 윤석열 정부는 기금 고갈과 재정안정만을 강조해 기금고갈 공포와 세대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음. 게다가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손실을 끼친 바 있는 국정농단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와해시키고 있음.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인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재정운용 전략이 요구됨. 또한 반복되는 빈곤과 위기 불안에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기준중위소득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확대,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 등이 요구됨.

#### 4. 주거 정책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이후 자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세금 감면, 금융 완화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 이는 주택 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적극 조장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함.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유 안정성, 주거비 부담가능성, 주거 적절성 등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 갭통전세·전세사기 문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음.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땀질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책임 최소화에 급급한 모습을 보임.
- 작년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함.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하고,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 다주택자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도 12억원까지는 종과세를 하지 않기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함.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킨 것임.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함.

- 소결 및 제언

-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외면한 채,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에 전력을 다함.  
▲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세제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 폐기, ▲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임대차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결론

-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등 당면한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재정지출의 확대와 조세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를 복원해야 함.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의 안전망을 갖추고, 삶의 불안을 해소해야 비로소 국민경제 전체의 더 나은 성취도 이룰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관성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 등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함. 이는 결국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없고, 다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
-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강화와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다가오는 복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자본의 배를 불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 질 것임. 우리는 이미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바 있음. 앞으로 다가올 복합적 위기의 극복에서도 국가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임.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설정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서론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음.
- **2021년 7월**, 주**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라고 발언. 이어서 **2021년 9월**에는 ‘손발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노동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드러냄.
-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에는 ‘**15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부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노동개혁과 노조비리 척결을 주장함.
-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으며 이후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로 설정.
-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규정.
- **3대개혁과 3대부패척결**은 이후 노동개혁, 노조비리 척결을 제외하면 실제 진행된 것이 없으며 결국 노동개혁과 노조비리척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함.
-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방향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 윤석열정부는 노동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했으며 연구회는 **12월 12일** 권고문을 발표.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주요내용은 노동시간개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년단위로 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3개월로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근로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등.
  - 임금체계 개편의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직무·성과평가 컨설팅 확대, 정년연장과 이를 위한 임금·직무 조정,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
  - 기타 주요과제로는 격차해소방안 모색으로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로 플랫폼종사자 권리보장과 파견제 확대, 노사관계 개선은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제한 등의 내용.
- 경총,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
    -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인수위 시절 경총이 제출한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2022. 3.17)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후 추가적인 노동개악방향을 가늠할 수 있음.
- 1)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 규제일몰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 2) 기업 투자욕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 3)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쉬운 해고, 기간제·파견제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 4)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 법과 원칙,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면제 등
  - 5) 안전한 일터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처벌제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등
  - 6)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체계 전환, 전국민 고용보험 반대

## 2. 노동시간 개편(주69시간제)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안(2023. 3.6)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단위로 확대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1주 69시간 또는 80.5시간)하거나 1주 64시간 상한

- 선택근로제 확대 : 현행 전업종 1개월(연구개발 3개월)을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6개월로 확대
  -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확정을 노사합의시 변경 가능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
  - 부분근로자대표제 : 특정 직종, 직군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사 반영 절차 마련
- 문제점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보고서 2023. 4. 23)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중남미 3개국(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을 제외하고 최장시간 노동국.
    - OECD 평균 1,716시간에 비해 200시간이 많으며 평균수준이 되려면 주당 3.8시간을 줄여야 함.
    - 주당 69시간은 과로사 기준을 넘는 것이며 불규칙한 노동시간으로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
    -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휴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법정 연차휴가 소진율이 76.1%에 불과한 조건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실효성 의문
    - 현행 주당 64시간이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으며 2022년 상반기 5,793건이 허용되었으며 전년 대비 77% 증가
  - 노동시간 개편의 방향
    - 노동시간 단축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혁신, 생산성 향상과 불평등 체제의 완화, 일-생활균형의 회복 실현
    - 69시간제의 폐기, 노동시간 관리감독의 강화,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 주4일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안전운임제, 안전배달제등)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노동시간 제한

### 3. 비정규직 확대 정책

- 현황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22.1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 분석 결과, 비정규직은 900만명, 전체 노동자의 41.4%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64.6%, 월 임금은 53.7%
-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는 469만명(21.6%), 파견용역근로는 79만 5천명(3.8%)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3 불평등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발표) 비정규직 규모증대가 양극화의 주된 원인 58.5%,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너무 많다 68.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하다 76.0% 동의
- 윤석열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 경총, 기업정책 제안서에 기간제, 파견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
  - 윤석열정부, 기간제 확대(2년에서 4년으로), 파견제 확대(2년에서 4년, 파견업종 확대)
  - 파견제도 선진화의 명분으로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추진. 현재 파견법상 금지되어 있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허용 추진. 상반기 경사노위 산하 연구회를 통해 개편안 발표 계획
- 과제
  -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
  - 비정규직 양산제도인 기간제·파견제 폐지 또는 기간제·파견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과 확산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사용자,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부과

#### 4. 노동조합 탄압

- 노동조합에 대한 집중탄압
  - 2022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기
  - 건설노조에 대해 채용 강요, 전임자 임금지급, 타워크레인 월레비 등에 대해 건폭으로 지칭하며 집중적인 탄압 진행 중
  - 화물, 건설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화물운송차량, 건설기계차량 등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위를 통한 불공정 담합행위로 규제
  -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노조 회계자료 제출, 현장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국가보안법 사건을 통해 노동운동, 진보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

- 건설산업 현실과 노조 탄압의 본질
  -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5%**, 종사인원은 **200만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청업체 이하의 하도급은 제한되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계약직·일용직이 **87%**이며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이 **94%**, 연평균 **220일** 근무. 한시적 고용과 실업이 반복.
  - 직업소개소 등의 합법적 근로자공급이 아니라 팀·반장등 불법적인 도급업자를 통한 인력공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간착취, 불법고용 등이 만성화되었음.
  - 건설노동자의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노조가 집단적인 고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협상을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한 것을 채용 강요, 갈취등 법범행위라고 칭하고 있음.
  - 노동조합 회계자료는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행정관청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열람권을 인정하지만 자료의 외부유출이 가능한 복사는 조합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

## 결론 : 노동개혁의 방향

-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은 개혁의 외피를 쓴 친기업, 반노동정책이며 주 **69시간제**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친자본편향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음.
- 한국사회는 지속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임.
- 노동개혁의 방향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통해 불평등체제를 완화해야 함.
- 구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비정규직·중소기업노동자의 생활안정, 파견법·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확대정책의 제한, 초기업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등 필수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

# 권력기관 운영 평가 - 국가권력기구 운용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서론

-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 인사장악과 시행령통치
-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경쟁과 복지부동)

## 이슈별 평가와 제언

### 1. 검찰공화국의 형성과 유지

- 현황 및 문제점
  - 검찰주의 행정, 검찰편중인사의 폐해
    - 행정조직 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에 위반
    - 3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
    - 인사검증의 불투명성
    - 견제와 균형 실패
  - 시행령 통치를 통한 법치주의 파괴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소위 검수원복 시도(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독점을 통한 지배
    -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지 노력(검찰수사관 등 직접수사인력)
    - 야당에 대한 표적보복수사, 공안수사

- 소결 및 제언
  - 제도개선
    -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기구 설립
    - 수사기소분리 제도화(검찰수사관 재배치)
    - 수사절차법 제정
    -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확보
  -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대응
    - 위헌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
    - 국회패싱방지법 등 입법에 의한 대응

## 2. 검찰공화국의 조력자들

### 1) 경찰 - 종속화

- 경과
  -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설치
  -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담 및 경찰청장의 사임
  - 행안부장관의 입법예고기간 단축 및 전국경찰서장 회의
  - 경찰국 시행령 및 지휘규칙 제정
- 문제점
  - 위헌·위법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의 형해화
  - 인사권을 통한 정부의 경찰지배
  - 경찰국 설치와 이태원 참사
  -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마약수사와 이태원참사
- 소결 및 제언
  - 경찰국 시행령 폐지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 2) 공수처 - 무기력

- 경과
  - 2019. 12. 30. 공수처법 가결
  - 2020. 7. 15. 공수처법 시행
  - 2020. 1. 21.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취임
  - 2021. 1. 28. 헌법재판소, 공수처의 합헌성 인정
  - 2022. 5. 10. 윤석열 정부,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및 검경수사권 재조정을 국정과제로 제시
- 문제점
  - 수사인력의 부족과 인력 이탈
  - 주요 사건 무죄선고(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무혐의처분(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사건, 검찰이첩후 무혐의)
  - 집권세력에 대한 무력감과 존재감 부재(윤석열, 김건희 관련 사건 등)
- 소결 및 제언
  -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 기소범위 확대, 우선적 기소권 보장
  - 공수처장의 협조요청 권한 강화
  - 공수처의 인력 규모 확대
  -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
  - 자문기구의 민주적 운영
  - 통신자료 조회 관행 개선

## 3) 감사원 - 선봉장

- 문제점
  - 감사원의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
  - ‘표적감사’논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
  - 서해 사건 감사 전 과정에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 절차 위반
  - 당사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및 개인정보취득

- 소결 및 제언
-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 절차의 적법성, 공정성을 다시 확립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 위법한 감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규명
-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원의 각성 촉구

#### 4) 기타 조력자들

- 언론은 검언유착
- 법원은 방관자? 견제자?
- 여당은 충성경쟁,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 3. 국정원 개혁의 퇴행

- 경과
- 2022. 5. 5.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담당 검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 2022. 11. 14.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2. 11. 28. 윤대통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 2023. 1. 13. 국정원, 공직자 인사검증 위한 신원검증센터 신설
- 2023. 1. 18. 국정원, 국보법위반 혐의로 사상 첫 민주노총 압수수색
- 2023. 1. 19. 국정원, 방첩조직 신설
- 2023. 1. 26. 윤대통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발언
- 2023. 2. 6. 국정원, 검-경-국정원 삼 주체의 '대공합동수사단'구성 보도
- 2023. 4. 18. 윤대통령,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공포
- 문제점
-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귀
- 국정원 및 대통령의 보안 권한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

- 소결 및 제언
  -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법 개악 시도 저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 신원조사 제도 개선
  - 국정원 개혁과제 적극 도입, 제도화 : 정보감찰관제 도입, 예·결산 투명성 강화,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한 감독·통제 강화, 사이버 영역에서의 국정원 역할·권한 감축, 대외정보원으로의 구조적·실질적 변화, 기획·조정권 분산, 인적·물적 자원 감축 등

## 서론

-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흐름에 발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를 천명하는 등 출범 시부터 반환경 정책을 시사.
-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수명이 다해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고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또한, **4대강 보수**를 다시 달아 강의 흐름을 막으려 하고, 개발시 환경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공항 등 국립공원 개발을 허용. 심지어 자원순환정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유예하는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후퇴하고 글로벌 흐름에 역행.
-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기준·제도 등 보편적 국제규범과 국제흐름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후·생태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

- 현황 및 문제점
-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22년 G7은 석탄 연료 사용 폐지, G20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미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릉과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

- 원자력발전의 경우, <2022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총 발전량에서 핵발전은 9.8%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감소. 한편,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은 10.2%로 핵발전 비중을 역전. 이미 세계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 반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 원전 확대를 천명하며, 수명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기간 연장을 시도 중.
- 재생에너지의 경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상황. 독일과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이미 각각 46%, 40%에 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EA)는 2025년까지 중국, 유럽연합, 미국, 인도가 주도하여 전 세계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7.15%에 불과. 이러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30.2%라는 당초 목표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21.6%로 비중을 더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 또한, 2023년 전략산업기반기금 예산안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2022년 대비 1,548억원 감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44억 감액.

● 소결 및 제안

-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등 글로벌 흐름에 역행. 미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
-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
  - A.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B.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 C.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2.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평가(환경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까지 해제하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는 개발 우선 기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이자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의 주 서식지인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마구 해제.

- 설악산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임.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개발을 조건부 협의 혹은 조건부 동의로 허가.
- 또한, **2023년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광역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을 30만㎡에서 100만㎡로 3배 이상 상향하고, 절대 해제가 불가한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 가능하도록 조치. 사실상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
- 환경영향평가 또한 '규제완화/합리적 규제'라는 이름으로 간이평가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특별법 등과 같은 각종 지역특별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하는 등 평가제도의 무력화가 예상.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보호구역은 현재 기준(2023.4.20.) 육지 면적 대비 **16.97%**, 해양 면적 대비 **2.46%**에 불과. 또한,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보호의 주요 지표인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가 2022년 기준 **0.69**로, OECD국가 평균 **0.88**보다 낮아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보호가 열악한 상황. 심지어 우리나라 적색목록지수가 **2000년** 대비 감소해 악화되었는데, OECD 국가 평균 보다 **3.5배**나 높은 감소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 보호지역 해제 및 개발 추세로 인해 생태자원 손실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소결 및 제언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는 생태적, 유전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오락적,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및 인간 웰빙의 기초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 윤석열 정부는 보호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도외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생태자원을 무분별하게 잠식.
  - 미래세대의 생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
    - A.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을 각각 최소 30%까지 확대**하고,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마련
    - B. 환경영향평가의 정보투명성 확보 및 주민수용성 제고

### 3. 4대강 대규모 녹조 문제는 외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는 뒷전

- 현황 및 문제점

- 4대 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으로 16개의 보가 건설된 후, 문재인 정부 동안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과 달리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녹조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없이 낙동강 보 수문을 계속 막고 있고, 심지어 금강과 영산강 보 수문도 막으려는 정책을 추진.
- 지난 2022년 낙동강·영산강의 녹조가 심각한 지역 주변 논에서 재배한 쌀 시료 23개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S-MS/MS)와 효소면역측정법(ELISA kit)으로 분석한 결과, 낙동강 6개, 영산강 1개 등 7개 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MCs)이  $0.51\mu\text{g/kg}$  ~  $1.92\mu\text{g/kg}$  검출. 이는 체중이 60kg인 성인의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독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생식독성 기준치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수치. 낙동강에선 2021년 조사 결과 쌀, 배추, 무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등 2년 연속 녹조 독소 검출.
- 한편, 지난 2022년 낙동강 주변 공기 채집에 성공한 지점 11곳에서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이  $0.1\text{ng/m}^3$ (경남 함천군 저수지)~ $6.8\text{ng/m}^3$ (대동선착장 배 위)가 검출. 낙동강 기슭에서 직선거리로 1.17km나 떨어진 부산 ㄱ아파트 옥상에서 채집한 공기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1.88\text{ng/m}^3$ 이 검출되는 등 공기를 통해 독소가 낙동강 주변 지역까지 확산.
- 4대강 유역의 녹조 핀 강물이 농업용수와 강변 여가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녹조 위험 노출이 심각한 상황.
-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에서도 생식독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프랑스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치를 강화하는 추세.

- 소결 및 제언

- 윤석열 정부는 이미 낙동강, 금강 지역의 농수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등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도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저평가해 문제 해결을 외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
-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
  - A. 4대강 보 개방(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조기 집행)과 자연성 회복 정책 강화

- B. 실질적 조류경보제 강화 및 보건환경정책 연계 녹조 독소 관리제도 확립
- C. 녹조 독소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 등 민간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 결론

- 국제사회는 2015년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기후협정> 채택 등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세계 주요국가들의 ‘탄소중립 2050’ 선언, G7 및 G20의 석탄발전 폐쇄 및 단계적 감축 합의, 세계 주요 기업들의 RE100 선언 및 ESG경영 참여 등이 증거. 이는 환경보호 및 사회형평성 고려없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
- 2015년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한 <202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DSN)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8년 동안 성평등 및 불평등 문제와 기후 및 생태분야가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미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윤석열 정부의 기후, 에너지, 환경정책은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역행. 21세기 한국의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
-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여,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국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요청.
  - 1)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2)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 3)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 4)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을 각각 최소 30%까지 확대하고,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마련
  - 5) 환경영향평가의 정보투명성 확보 및 주민수용성 제고
  - 6) 4대강 보 개방(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조기 집행)과 자연성 회복 정책 강화
  - 7) 실질적 조류경보제 강화 및 보건환경정책 연계 녹조 독소 관리제도 확립
  - 8) 녹조 독소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 등 민간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서론

- 농정실패의 원인을 농민에게 책임전가
- 풍년농사 짓기위해 애쓰는 농민들을 오히려 떼쓰는 농민으로
- 농산물 생산비 보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소비자물가지수 낮추는 희생양으로 전락한 농업
- 이제는 주식인 쌀까지 시장논리에 내맡기며 농민을 냉정하게 걷어차는 윤석열 정권

## 이슈별 평가와 제언

1.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 시대 이제는 식량주권을 논의할 때
  - **2022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0.5%** 곡물자급률은 **18.5%**로 **20%선**이 무너졌다.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 30.9%**에서 **2020년 19.3%**(유엔 식량농업기구 집계 기준)로 **20년간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를수록 한국은 유독 더 힘들어진다.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지만,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식량 안보’에는 경고등이 들어온 지 오래다. 특히 밀(자급률 **0.08%**)과 콩(**30.4%**)은 상황이 심각하다. 또한 심화하는 기후 위기로 먹거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 하지만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이 국내 경제에 거의 **10년** 주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당장의 위험이 지나가면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이제는 그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남아돈다고 난리인 쌀조차도 **100%** 자급이 되지 않는다. **84.6%**인 쌀을 제외하고는 주요 식량 작물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 이처럼 글로벌 식량 가격 급등에 우리나라 물가가 덩달아 출렁이는 것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sup>1</sup>, 곡물자급률<sup>2</sup>이 낮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은 두세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기후 위기에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하는 때부터 한국이 먹거리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이고, 만약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제재 등의 상황이 발생, 한국이 봉쇄되어 외국의 화물선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개월 이내에 국민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 하지만 정부는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보다 농산물은 언제든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을수 있다는 논리로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져놓는 등 위기를 대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 농업은 기후변화라는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디지털화를 앞세워 대규모 산업화 쪽으로 가고 있다. 성장이 아니면 퇴출이라는 구호는 미래에 디지털화 아니면 퇴출이 될 것이다. 이는 노동력의 해고를 뜻한다.
- 농업의 산업화가 매우 극단적으로 진전되어 있으면서 전국 평균 경작면적 1.5ha 미만이 78%에 가깝고, 농축산물 판매 금액 1천만원 미만 농가가 68%에 달한다.
- 농촌 내에서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당장 10년 후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 2. 폭등하는 농업생산비와 폭락하는 농산물값 외면하며 농산물 수입에만 몰두하는 정권

### 1) 윤석열정권은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1년동안 도대체 무얼했나?

####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다. 2021년 수확기 쌀값이 53,535원이었던 것이 2022년 9월 쌀 값이 40,393원으로 약 25% 폭락했다. 모든물가가 다 오르는데 쌀값만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쌀 과잉과 쌀값 폭락 문제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된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
- 쌀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자 국가의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보루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2022년 기준 84.6%),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sup>1</sup> 식량자급률이란 사람이 먹는 주곡작물(쌀,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뜻함

<sup>2</sup> 곡물자급률은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용을 포함하는 곡물 전체의 자급률을 뜻함

‘우리는 쌀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참을 만했던 거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면 곡물 자급률이 **20%**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많은 국민은 ‘식량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쌀을 지키는 비용을 낭비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자기나라 국민인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쌀값 문제를 해결해달라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다.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농민들을 위로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태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물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래 취지가 많이 손상되었고, 의무 매입 규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후 농민들을 설득을 하면 되는 일이다.
- 우리는 묻고 싶다. 윤석열 정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1년의 과정 동안 정부는 도대체 대안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노력은커녕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쌀 과잉생산 우려” “국가재정의 과잉소모” “시장원리에 위배” 등을 이유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까지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 공공연히 내비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주의협동농장법 양곡공산화법 등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활동하기도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을 동원하여 거짓논리를 생산하여 여론을 호도했고 농식품부 역시 이 논리에 기반하여 차관이 지역을 순회하며 농민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켰다.
-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돌아 적정생산을 해야된다고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84.6%**이고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100%**가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했다.
- 쌀이 남는 이유는 수입쌀 때문이고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수입 이라는 사실은 썩 빼놓고 매년 쌀이 남아돌아서 난리라고 한다. 또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쌀값 하락은 당연하다고 한다.
-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기준과 전국 **1,540가구**( 농가 **640가구**, 비농가 **900가구**) 밖에 되지 않는 적은 표본조사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산출시 쌀 가공식품(햇반등)

구매와 급식 소비량은 제외하고 가정에서 밥, 떡을 만든 경우만 포함시켜서 발표하고 있다.

- 요즘 집에서 먹는 밥이 하루 한끼가 될까 말까하는 현실에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고, 매년 **40만 8700**톤씩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채 오직 쌀이 남아돈다는 논리만을 펼치고 있다.
- 쌀값 폭락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45**년만의 대폭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결국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대통령은 거부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칭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 또한 쌀값도 시장논리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논리에 따른다면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가계지출비중이 낮은 농산물가격부터 개입하며 막대한 물량수입으로 농산물 가격 조정에 들어가 농민들만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 소결 및 제안

- 윤석열 정권은 정부예산중 농업예산 비율이 **2.8%**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충분히 농업예산을 확보할 생각없이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혹은 밀, 콩 등 타작물 자급률 제고와 쌀의 안정적 생산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프레임을 짜고 농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반도체 생산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반도체특별법은 되고 국민의 주식인 쌀의 중요성에 맞는 특수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논리다.
- 우리는 농업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 쌀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도입해야한다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가격의 기준은 밥 한공기 쌀값 **300**원은 보장되어야한다.
  -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미 비축물량을 **100**만톤 이상 확보해야한다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톤을 넘어 **100**만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하라
  - 쌀 자급률 **100%** 명시해야한다  
국민의 주식이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양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 명시해야한다

-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해야한다.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한다.

-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 2) 폭등하는 생산비에 고통받는 농민들은 외면하고 기업의 농업진출 발판마련 지속가능하지 않는 농업을 위해 막대한 농업예산 투입하겠다는 의지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겨울철 폭등한 난방비 폭탄을 맞은 하우스 농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폭등한 생산비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올해 초 우리나라가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조류독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관세로 달걀을 수입해서 달걀값을 폭락시켰다. 이제 수확기를 맞은 양파 마늘 농가들도 또 작년처럼 저관세로 수입농산물이 들어올까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도무지 그 속이 짹짹하다. 양곡관리법은 거부해 놓고 국산농산물을 써야만 ‘전통주’로 인정한다는 전통주 기준을 개정하여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도 전통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현재 **70%**를 수입쌀을 원료로 쓰고 있는데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주요 농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상승세로 전환하겠다”면서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 부분의 기술·자본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농업경영체도 ‘기업경영방식’을 적용, 투자확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족농에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농업법인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비농업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한다.

-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하에 현재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고, 청년농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본격 확대한다고한다. 신산업 분야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농업에 정보통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산업 등 관련 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이 아니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는 그냥 산업이다. 이는 농업생산 분야에 기업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이는 반드시 농업부문을 훼손하거나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도시 부문에 들어와잇는 식물공장이나 배양육 산업 등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 식량안보 확보와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발전을 이야기하며 기업에게는 농업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농업에서 농민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 소결 및 제안
  - 경기침체기에 자본과 기업에게 농업·농촌을 그들의 시장으로 내주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50ha 이상의 노지스마트팜 조성은 ICT·시설설치 자본의 이익에 적합한 사업이다. 또한 청년농민들에게 30억 가까운 보조금을 주면서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 지금도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도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0억 보조를 해주며 스마트팜 농사를 부추기는 정권은 청년농을 위한것인지 스마트팜 업자를 위한 것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은 청년농들이 도저히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어 스마트팜을 손놓게 되면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막대한 생산비가 드는 스마트팜에 누가 거기에 달려들 것인가? 호시탐탐 농업진출을 노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농업을 살리는 구세주라는 가면을 쓰고 달려들지 않을까?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 결론

- 2022년 농업평균소득이 1105만원이었다. 농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들은 오늘도 먹고살기 위해 농사일과 농번기에는 공장에서 조선소에서 식당에서 농업노동자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농업을 이어가고 있다.
- 농민들이 내년에도 농사지을수 있도록 농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 우리는 지난 시기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기업이 농촌에 들어오는 순간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농민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농촌의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다.
- 기업의 농업진출은 꼭 막아내야한다
- 농업포기 농민말살을 일삼는 윤석열정권을 이제 우리 농민들이 거부한다

## 서론

-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의 특징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주변국 관계와 협력의 약화를 감수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 아래에서는 이들 3가지 대북 대외관계 정책 방향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함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대북관계 :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와 전쟁위기의 심화

- 현황 및 문제점
- 한반도 프로세스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단계적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 속에서 성과 없이 끝난 이래, 남북 및 북미관계가 교착되고 악화되어 왔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공표했던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유예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왔음,
-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해 왔음. 특히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 ‘미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이 그것임.
- 지난해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전개되었고, 올해 3월에는 이들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실기동훈련까지 포함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실시되었음. 한미

당국은 전에 없이 빈번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면서도 훈련내용이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투입 및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과시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핵 무력의 발전을 급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음. 또한 핵실험 이래 스스로 천명해왔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핵선제공격 개념을 법에 명시함. 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언급,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하기로 한 대북 핵선제공격 옵션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또한 북한은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상응하는 무기 체계의 실험과 훈련을 역시 강화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고,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음.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양보 없는 무력시위로 한반도에서 무장충돌 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음.
-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대응을 해야만 북한의 도발 의지가 무력화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군사행동도 빈번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남한의 핵 보유 또는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을 언급해왔음. 그러나 미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어디로부터도 지지를 얻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처방임이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확인되었음.
- 한미정상은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NPT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한미 당국간 정례 협의와 공동 기획,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등을 강화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기로 했음.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핵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 소결 및 제안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된 이유는 북미와 남북이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북한의 선제적인 핵-미사일 실험중단에 상응하는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기를 망설였기 때문이지, 무력시위를 덜 한 탓이 아님.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거부하여 현재의 강대강 대치구도의 원인을 제공했음.

-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 위주의 적대 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힘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평화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변경해야 함.
- 특히 ‘관계개선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이라는 남북, 북미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포괄적 제재의 일부 완화 등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2. 한미관계 :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과 주변국 관계 악화

### ●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여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시킬 것을 주장해 왔음.
- 윤석열 정부는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조하여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 문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지역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
-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조하지만, 호혜적인 협력보다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배타적인 안보 구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항행의 자유 보장’, ‘공급망 안정성 확보’, ‘에너지 및 경제안보협력’ 같은 협력과제들이 미중 전략경쟁 혹은 대러시아 제재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실질화’한다는 이유로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음. 한미일은 또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과 연관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해왔음.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후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였음.
  - 한미일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역시 과거와 달리 진영화되는 경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음. 중국 정부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특히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을 요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관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유엔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모두 좌절되었음.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 역시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형국임.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화되고 한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개입적 발언의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한반도 서해 등지에서의 중국군의 군사훈련도 한층 잦아지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대러시아 제재, 대중국 무역통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배터리, 전기차 등의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반도체 보조금 신청 시 영업기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통상 협상은 배터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이 없어 한국 기업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보 당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에 관해 아직 정식으로 항의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 대신 ‘악의는 없었다’며 미국의 행동을 두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소결 및 제안
    - 윤석열 정부의 배타적인 한미동맹 편중 정책은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희생하고,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실질화해야 한다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정당화해왔으나 핵 및 재래식 전쟁 위험과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역설을 초래하고 있음.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협상의 지렛대는 약화되었고, 도리어 대만해협 문제 등 지역분쟁에 연루될 위험과 분쟁발생 후 방기될 위험이 모두 커지고 있음.

- 한미군사동맹관계에 편승하는 배타적이고 의존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직시하고 주변국과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함.
- 정부는 역내 핵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한반도 핵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함. 핵 억지력, 군비경쟁,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군사적 강압적 전략과 수단보다는 대화와 협력, 평화와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는 전략과 수단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야함.
- 경제를 안보수단 혹은 제재수단으로 동원하고 경제협력망 자체를 분단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경제안보’를 내세운 협력의 결과가 호혜적이지 않고 그 주도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협력자들이 희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더더욱 지속가능하지 않음.
- ‘경제안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정책 조율과 통상무역관계의 조정, 이에 따른 산업전환 등의 구조조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함.
-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도청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법에 따른 조사, 수사, 국회청문회 등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3. 한일관계 :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인권, 정의, 미래한일관계의 파괴

- 현황 및 문제점
  - 일제의 강제동원 등에 관해 대법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서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이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제안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에 통보한 후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음.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은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임. 정부의 결정으로 법원이 최종 판결한 피해자들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님.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해법’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일본 기시다 내각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임.

-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것은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임.
- 이런 술한 문제들을 국민의 동의와 합의,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없음. 오히려 장래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양국 시민간 갈등을 키울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갈등 현안에서의 일방적 양보는 미국이 요구해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일본 우파의 역사수정주의와 군사주의가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힘을 얻고 있음. 반면, 일본의 방위예산 증강,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용인함으로써 일본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일본인 시민사회에도 큰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음.

- 소결 및 제안

-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 방식 해법은 피해자 인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함은 물론 일본 우익의 역사수정주의와 군사주의를 지지하는 일방적인 정치적 타협을 강행함으로써 미래 한일관계에도 큰 갈등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음.
-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 한일 정부간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이 요청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며, 이 군사협력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사법 주권을 옹호해야 함.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는 한편, 과거사 실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에 즉각 항의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함. 정부는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여 되돌릴 수 없는 환경훼손을 멈추어야 함.
-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동아시아 전쟁위기와 군사대결 심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 등 한일 군사협력 기구와 협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함. 한일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줄이고 평화와 협력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발전시켜야 함. 특히 일본의 평화 헌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이 평화헌법과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미래 평화협력의 축을 삼아야 함.

## 결론

-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달고 있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로 인한 관계악화의 악순환 등 3중의 악순환의 덫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음.
- 한반도 상황이 총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협상의 기회, 협력의 공간도 여전히 남아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보다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 지금은 ‘억지’가 아니라 무력 총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임.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심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함.

## 서론

- 윤석열 정부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한국 사회 내 고조되고 있는 페미니스트운동에 대한 백래시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선거 시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고 발언하며, 어떠한 근거나 논리도 없이 단 7글자로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였고, 2022년 10월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하였음.
- 현 정부는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또한 ‘젠더갈등’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으로 성평등 의식, 페미니즘이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편견을 재생산 하고 있으며, ‘차별’, ‘격차’를 ‘갈등’으로 치환하여 한국사회 존재하는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비가시화 하고 있음.
-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해소는 모든 국가의 과제임.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책무인 성평등 실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및 권익증진 등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성평등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에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점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성평등 정책,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함.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함. 그러나 2023년 2월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시킬 것을 합의하였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반대하고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추후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고,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는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임.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소결 및 제안

-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필요성이 명시되었고, 한국은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고 이후 가족, 보육, 청소년 등의 업무가 더해져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이어져오고 있음.
- 정부 정책은 젠더 정의를 구현하는 직접적인 실천행위이므로,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과 체계를 통해 차별과 폭력을 종식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책무를 이행해야 함. 또한 정부 정책의 설계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성인지관점이 통합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고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강화·확대되어야 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강화 방향 :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 및 예산 확대 (젠더·일·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권한과 기능 부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 모든 광역, 기초 단위 지방정부에 성평등정책 전담 기구 설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강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국제 지표의 관리를 통한 구조적 성차별 개선 정책 계획·집행·평가·환류, 채용과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고용평등정책 추진 등), 여성(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대,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마련, 이주민, 장애인,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 정책 사각지대 해소.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젠더 폭력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개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누구나 돌봄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강화,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강화 등

## 2.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강간죄로 인정하는 ‘최협의설’을 바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 요구해옴. 유엔도 한국정부에 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함.(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 화할 것을 권고).
- 비동의 강간죄는 20대 국회에서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하여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함.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가 반대의사를 밝히자, 발표 9시간 만에 철회함.

- 소결 및 제안

-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임.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표현의 자유가 아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운명결정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성행위에 대한 서로 다른 의사결정

자체를 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성적 행위를 한 것, 그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인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으로 상대방의 개인성과 상호주체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임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강간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협의의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형법」제297조 및 관련 조항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 필요함.

### 3.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가시화 :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

-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이자 사회 참여를 가능케했던, 개인별 지원계획의 핵심 서비스임. 활동지원 국고 예산은 '07년 시범사업으로 15억원이 편성된 이후, '23년에는 약 2조에 이를 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3년 기준 장애인정책국 전체 예산 4조 5천억원의 44%에 달하고 있음.
- 활동지원 예산 증가의 속내용은 서비스 확대가 아닌 활동지원사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거주시설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소수의 장애인이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44%를 가져간다.”, “한 사람이 시설로 나와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갖추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며, 탈시설을 공격하는 기제로 삼고 있음. 나아가 ‘개인예산제’로 둔갑시킨 그들의 요구사항은 입맛대로 쓸 예산을 활동지원예산에서 빼다 쓰겠다는 의도가 감지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동지원 24시간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의 10%~20%를 다른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안)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지원서비스 필요를 비가시화하고 삭제하는 조치임.
-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운동이 활동지원서비스가 없어서 억울하게 죽어간 동지들의 죽음과 이에 저항했던, 치열한 투쟁으로 만들어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뒤흔들려 하고 있음.

## 결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여성운동의 결과로 진전되어 온 성평등과 인권,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무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음. 특히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존하는 차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음.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와 더불어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의 과제를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오랜 논의 끝에 계획 됐던 부성우선주의원칙 폐기를 위한 민법 개정, 협소한 가족 범위, 차별적인 ‘건강가정’ 개념을 삭제하고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태임.
- 윤석열 정부의 노동, 복지, 저출생 정책들은 여성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며, 여성을 또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 혹은 사회복지 시스템 상에서의 수동적이고 대상화되며 수혜자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여성을 ‘인구 생산의 도구’, ‘수동적 피해 집단’으로, 여성은 결혼, 출산, 돌봄과 양육의 전담자, 남성은 생계부양자 등 성차별적, 성별이분법적인 한국사회의 제도와 문화와 바꾸고 동등한 주체로서의 여성을 ‘주권자’, ‘시민’으로 세우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들이 무너지고 있음.

## 서론

- 윤석열정부는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재난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제출함. 노동안전 영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과제로 내놓음.
- 윤석열정부의 안전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하고자 함. 첫째는 10.29 이태원참사 대응으로 본 사회적참사에 대응에 대한 평가, 둘째, 노동안전 정책 평가, 세 번째는 안전인력 및 안전규제 등에 대한 평가임.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 ● 현황 및 문제점

##### 1) 재난 대응의 총체적인 실패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이 목숨을 잃고 추후 1명이 사망하여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함.
- 경찰과 용산구청은 핼러윈 관련 다중밀집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보고문건을 작성하거나 긴급 회의를 개최함. 그러나 행안부와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모두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 10월 29일 18시 34분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용산구청 상황실, 현장 경찰들은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못함.
- 참사 발생 후 소방, 경찰, 의료 간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소통, 조정 기능을 담당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늦게 설치되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설치되지 않아서 구조 구급은 난항을 겪고 수습은 지체되었음.

- 특수본 수사 외에 별도로 참사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지 않음. 정부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TF를 운영하여, **2023년 1월 27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재난대응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 없이 대책을 나열하고 있음.

## 2) 정부 책임의 회피

-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중대본 회의 이후,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도록 각 기관에 지시함.
-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용산구청장의 책임회피 발언, 경찰은 **10월 31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쏠릴 수 있다며 시민단체 동향을 수집하고 대책을 정리한 ‘정책참고자료’를 작성, 법무부는 **11월 1일** ‘이태원 핼러원 참사’ 법률지원단에 “국가 책임과 관련 신중한 상담을 해 달라”고 요청.
- 윤석열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음.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언론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

## 3) 피해자 권리의 침해

- 희생자들을 **46개** 병원으로 흩어놓았으며, 유가족의 신원확인을 가로막음. 희생자 전원에 대한 검시.
- 피해자들 간의 소통을 요구한 유가족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는 연락처 공유에 협조하지 않음. 위패 없는 분향소 설치에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음.
- 현재도 서울시는 유가족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철거 협박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음. 여당은 유가족의 특별법 요구에 대해 ‘과잉입법’ 혹은 ‘재난의 정쟁화’ 등으로 비판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음.

## ● 약평과 제안

- 윤석열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총체적인 실패를 인정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 **2022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80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무시로 일관함.
-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시민의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2020년 11월 발의**)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함. 10.29이태원참사에서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도 필요함.

## 2. 노동안전 정책

- 현황 및 문제점

###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 윤석열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음.
- 2023년 1월 11일 정부와 전문가로만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 명확화, 제재 방식 개선, 50인 미만 적용 대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023년 6월에 개정 법안 마련하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경영책임자 규정 완화와 형사처벌 삭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230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에서 기소의견 송치는 34건으로 15%에 불과하고, 검찰 기소는 11건이었음.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음.
- 법 제정 이후 사고 사망은 54명 감소했고, 2022년 6월까지 감소 추세였음. 그런데 윤석열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함.

### 2) 과로사를 부르는 노동시간 개악

-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의견 수렴 중.
-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 이에 따르면 주 69시간, 주말노동까지 하면 주 80.5시간에 이르는 불규칙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위험이 증가함.
- 2021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한국이 1,915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6에서 199시간 길게 일함.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초과나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 사고 발생률이 37%까지 증가. 1주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는 경우 사고 위험이 88%나 증가함.

### 3)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이름의 위험 방치

- 정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현행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률을 0.29로 줄이겠다고 발표.
  -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제화하겠다고 하며, 이 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함.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로 돌리는 것.
  -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감독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려고 함.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감경과 연계함.
  - ‘중대재해 작업중지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 등을 후퇴시키려고 함.
- 약평과 제안
    - 윤석열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이름으로 관리감독을 면하게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여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고 시도함. 그러면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고 함. 노동시간 개악을 통해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강요하고 과로사와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음.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안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노동시간 개악도 사회 전체를 기업의 시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 노동계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 노동자 참여가 핵심임. 작업중지권이 실질화되어야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참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함.

### 3.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와 안전 산업

- 현황과 문제점
  - 1) 안전 예산과 안전 인력 축소
    - 윤석열정부에서 안전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논란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에 제출된 기재부의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예산은 수해 대응체계( 5.0→5.8조원)로 구성되며, 그 내용도 하천정비, 대심도 터널 등 건설토목 분야 예산임. 즉 재난 대응 예산 조차도 SOC에 집중되어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정부인력 운영방안을 통해 매년 각 부처 청원의 **1%**를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신규채용을 줄이는데 소방관도 대상에 포함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 7. 29)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의 축소·폐지·민간이관 등의 계획이 발표됨.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교육 축소,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축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민영화,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사용시설 정기검사 축소계획 등.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지침에서 안전관련 경영평가 지표 수정. 산업재해 관련 안전 확보 노력 성과를 3점에서 **0.5점**으로 축소, 재난 대응 관련 부분은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으로 **2점**이 줄었음.

## 2) 안전 규제 완화

- 2022년 10월 17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폭발 예방 설비를 만들도록 규제 완화하기로 함. 반도체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현행 설치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함.
-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함. 저위험으로 분류된 물질에 대해 취급시설기준과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임.
-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에서는 기업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화학물질관리법 57조 위반)나 기업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환경범죄단속법 3조2항 위반) 받게 되는 형벌 수위 낮추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경우(환경범죄단속법 3조1항 위반)도 형벌 수위 낮추기로 함.

## 3) 안전의 산업화

-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17일,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출범.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며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함.
-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 이태원참사 이후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모든 CCTV를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전환, AI 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 대책 제시. 그러나 이태원참사는 기술기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체계의 문제.
- 정부는 2022년 7월 '바이오 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고 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추진. 원격의료 플랫폼 기업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용인,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어 공공의료 데이터와 병원 진료기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 약평과 제안

- 규제완화에 대해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추진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에 밀려 안전 인력이 축소됨. 소방이나 의료 등 안전영역으로 인식되는 인력만이 아니라, 관리감독, 공공교통에서의 정비 등 보이지 않은 안전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필요함.

## 결론

-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정부 재난대응의 총체적 실패를 확인함. 그러나 재난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은 찾기 어려움. 이태원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노동시간개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안전규제완화 등 안전을 후퇴시키는 계획을 계속 내놓음.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들이 뒤섞여 있고, 일부 정책은 여론 악화로 지연되기도 함. 안전을 후퇴하는 정책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
- 윤석열정부는 안전을 자신의 과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을 노동자 혹은 시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림.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려고 함. ‘안전권’을 권리로 인식시켜야 함.
- 안전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갖고 시민사회와 노동이 공동대응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대한 공동대응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위험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사회적참사가 됨.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안전대응시스템의 재구축,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력이 높아져야 함. 여러 참사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재난대응 역량이 높아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대응력을 더 높여야 함.

#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언론·시민사회 표적 탄압과 민주주의 퇴행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서론

- 제20대 대선,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 드러낸 윤석열 후보의 당선
- 윤석열 후보 미디어정책 공약 추상적 선언 수준 :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언론자유 보장, 가짜뉴스·악의적 왜곡 등 문제는 자율규제로 해결, 방송산업 진흥 위한 제도개선,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신뢰성 보장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 설치 등
- 새 정부 출범 1년 미디어정책 추진 손 놓고 언론장악 집중 :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탄압 노골화, 사정기관 및 사법 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 확대, 방송 장악 위한 규제기구 장악 본격화,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 실종
- 시민사회·현업 배제된 보수 편향적 반쪽짜리 미디어기구 지각 구성 : 산업규제 완화 및 공공미디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 발표. 시민의 미디어권리, 미디어기업의 사회적·공적 책무, 미디어 공공성 등 약화 예상
- 언론과 민주주의의 퇴행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공영방송 등에 대한 언론장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음.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단절은 물론 취재제한 등으로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사법과잉으로 인한 언론의 독립성 침해 규제완화로 인한 미디어의 자본종속 심화 및 미디어 공공성 후퇴가 우려됨. 정부 주도형 일방적 미디어기구 구성은 미디어거버넌스 통합 배제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켜 시민중심의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고 언론과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킬 것임.

## 이슈별 평가와 제안

### 1.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 소통 중단한 정부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 : 후보 시절부터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언론인, 언론노조 비방’ 발언(언론노조 민주당 정권 친위대, 거짓공작, 친여매체론, 언론장악론, 적폐청산 등) △“(언론을) 뜯어고쳐야 한다”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정치공작을 하려면 인터넷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 막말·망언으로 적대적 언론관 노출
- “불편한 질문은 하지 마라”? 언론과 소통의 실패 :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용산 집무실 이전하고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 시작했으나 2022년 11월 61회만에 중단. 거친 발언과 진중하지 못한 태도(대통령의 지시와 복종의 리더십, 잦은 격노 표출)
- 취임 후 맞는 첫 새해인 2023년 신년 기자회견 생략하고 신년사 발표로 대체 :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최초의 대통령. 더불어 새해 직전 보수신문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 진행. 조선일보는 2023년 1월 2일자에 5개면을 할애해 인터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 비판언론 취재 탄압 : 2022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논란 보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고, 외교부 통해 정정보도 청구함. MBC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 불성립. 두 달 뒤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외교부 4개월 뒤 정정보도청구 소송 제기.

- 소결 및 제안

-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 치고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메시지, 이미지, 이슈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후보자와 당선인 시절 “대통령은 귀찮지만 기자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아야 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언론과의 소통이 곧 국민과의 소통,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소신대로 더 깊이 있게, 더 밀도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연구하여 언론 및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야 함. 특히 언론과 신뢰의 관계,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정책전문가들 대통령리더십 핵심 : 소통과 통합](#)

## 2. 입으로 가짜뉴스 퇴치, 뒤로는 언론탄압 : 비판보도 보복성 사법 대응, 사정기관 총동원 언론 옥죄기, 방송장악 노골화

### ● 현황 및 문제점

- ‘가짜뉴스·불공정보도’ 프레임 낙인찍기 및 소송으로 재갈물리기 : 대통령과 측근 등 권력핵심 비판보도 불공정 프레임으로 낙인찍으며 고소·고발 :  
한국일보·뉴스토마토(대통령 집무실 선정 천공 관여 의혹/대통령실), 한겨레(김건희 여사 관저 선정 관여 의혹/여당인사), **MBC**(미국 순방 대통령 비속어 보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KBS**(검언유착 관련 한동훈 장관 개입설, 오보로 **KBS** 사과/한동훈 장관), 시민언론 더탐사(줄리 의혹,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국민의힘, 한동훈 장관), **UPI**뉴스(대통령 40년지기 황화영 사장 사무실 취재/황화영 사장) 등 사법적 대응.
- “권력 건들면 가만 안둔다” 대통령실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12)**에 출연해 천공 의혹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고발과 압수수색, 책 판매 금지가처분.
- “찍히면 수사” 비판적 언론 압수수색, 조사, 기소 : 더탐사 고강도 수사(2022.8~2023.4.22 압수수색 17회/강진구 대표 구속영장청구 2회 기각), 민들레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 [한동훈 장관 ‘정치깡패’, 윤석열 대통령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
- **MBC**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이후 국민의힘 **MBC** 항의방문 및 박성제 사장 등 고발,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외교부 정정보도청구 소송, 보수단체·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사건 경찰 조사, 감사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등을 2017년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투쟁 미참여자 취재업무 배제로 불이익 줬다며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KBS** ‘검언유착 오보’ 이후 [감사원 특별감사 세 번째 연장](#) : 소수노조·보수단체 국민감사청구로 2022.9월 시작.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이사회가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증자강행 배임 혐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유용 혐의 △前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여행시 병가처리 여부 및 사후 기록조작·은폐 의혹 △대전 직후 증거인멸 문서폐기 주도 의혹 등 조사. 검언유착 의혹 보도 기자 불구속 기소. 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조사 국민제안 이후 소수노조 경영진 퇴진 촉구, 국민의힘 전국에 수신료 강제징수폐지 현수막 게시.

- “미운털 박히면 손본다” 준공영방송 YTN 사영화 추진 : 국민의힘 대선 전부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 보도 이유로 YTN 항의방문 및 대표 면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정부 출범 후 2022년 9월 최대주주 한전KDN 지분매각 강행. 산업부 민관합동혁신TF ‘두 줄짜리’ 검토의견 매각권고 및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포함. 4대주주 한국마사회 지분매각. 한국경제, 한국일보 소유한 동화기업 등 인수전 속 동아일보(YTN)-TV조선(YTN라디오) 분할인수설. ‘24시간 보수편향 보도전문채널화, 언론장악의 외주화’ 비판 제기됨.
- 수도권 유일 지역공영방송 TBS 존립 위기 : TBS 공정성 문제 거론해온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후 편파방송으로 지목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와 진행자 퇴출, 방송개편 등 본격 압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지원조례 폐지, 오세훈 시장 출연금 감액 추진. 민언련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 TBS 다시 세우기 위해 진일보한 주민조례안 발안하고, 청구권자 2만5천명 서명확보 돌입. 언론노조 TBS지부 및 직능단체 서울행정법원에 지원조례 폐지안 무효확인소송 제기.
- 소결 및 제언
  - 보복성 비판보도 법적 대응 : 언론자유 침해, 언론의 권력감시 위축 효과
  - 공영방송 표적 : 검찰, 감찰, 사찰, 경제적 압박 등 온갖 수단 총동원
  - 부정한 법치 : 고소고발, 검·경 수사,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국세청 조사 등 오남용
  - 경제적 탄압과 자본의 개입 : 국민의힘 MBC 삼성 광고 중단 발언,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사영화) 민영화,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 \* 국세청 KBS, MBC, YTN 세무조사(MBC 추정금 520억 추정금 부과)
  - 윤석열 정권 지지단체 조직화 : 소수노조·보수단체 등 KBS, MBC 국민감사청구 주도→ 감사원 신속심의 및 감사 의결

### 3. 검찰 독재의 언론 길들이기, 방송통신위원장 표적수사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2022년 8월부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권력기관 총동원해 독립기관 무력화. 검찰 과잉수사(4회 압수수색, 50~60명 직원과 13명 심사위원 9개월간 반복수사) 후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 방송장악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 :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사수 표명하자 TV조선 재승인 심사건 조사.

- 소결 및 제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 및 임명권 가진 구조에서 비롯됨.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거대정당의 ‘정치적 후견주의’로 움직이던 지배구조 개선 필요. 현재 국회 본회의 부의된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 윤석열 정권의 정교한 전략 : 이명박 정권과 판박이(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 언론사 경영진 교체, 친정부 편파보도 주도할 간부 인사, 권력비판 저항세력 및 민주노조 탄압, 비판적 프로그램 폐지 및 축소, 친정부 홍보프로그램 편성과 실행)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 등 사정기관 권력남용을 통한 언론통제가 더욱 노골화될 것임. 특히 ‘사정기관-보수언론-보수(우익)단체-집권여당’ 카르텔의 검언유착, 정언유착을 통한 이념적 낙인찍기, 도덕적 상처 입히기, 부정적 이미지로 고립시키기에 맞선 시민사회와 연대전략 중요.
  - 앞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국무총리실 주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등 미디어기구를 내세운 본격적인 미디어정책 및 미디어구조 개편에 대응할 방안 필요.

#### 4. 시민사회 관련 제도정책의 퇴행

-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른바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 확산. 오랜 기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및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시민사회 전반의 대응이 필요함.
  - 감사원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감사 착수 및 신고접수 보도자료 배포로 시민단체를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국정기획수석의 보조금 부정사용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부정확한 사실 확산시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문재인정부 시절 발령한 대통령령) 폐지함.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진보적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지원 거점으로 왜곡하면서 예산 삭감, 축소 및 통폐합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음. 이런 일련의 조치는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소결 및 제언
  - 이전 보수정부에서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있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전방위적이며 지속적임.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시작으로 권력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해온 시민단체의 독자성을 위협하고 단체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 개별 단체 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시민사회 독자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법 제·개정 및 제도, 정책 변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해야 함.

## 2부

# 종합토론

---

좌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 메모

---

## 메모

---

## 메모

---

## 메모

---

토론회자료집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발행일 2023. 05. 03

발행처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익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